

의안검토보고서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8. 2. 15. 대전광역시장
2. 건 명 :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
대전 도시관리계획(GB해제)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
3. 안전요지 : 따 로 불 임
4. 검토의견 : 따 로 불 임

위 안전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8년 2월 일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전문위원 이 환 구

-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-
대전 도시관리계획(G.B해제)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

검 토 보 고

본 안건은 2008년 2월 15일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
2008년 2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1. 제 안 이 유

- 2020년 대전권광역도시계획상 조정가능지역(국책사업지구)으로 반영되었고, 2020년 대전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된 지역중
- 「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특구법”) 제4조와 같은 법 제6조 규정에 의한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상 1단계 사업지역인 유성구 방현·신성·죽동지구의 개발사업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(G·B해제)에 대하여
-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4조 내지 제 7조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을 위하여 같은 법 제6조제5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전광역시의 회의 의건을 청취하고자 함.

【관련법규】

-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4조(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), 제6조(주민 및 지방 의회의 의견청취), 제7조(도시관리계획의 결정)

2. 주요내용

가. 대전도시관리계획(용도구역) 결정(변경)조서

○ 용도구역 결정(변경) 조서

도면표시 번 호	구 역 명	위 치	면 적(k㎡)			비 고
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-	개발제한 구 역	대전 유성구 방현동, 신성동, 죽동 일원	310.793	감)1.360	309.433	

○ 용도구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구 분	도면표시 번 호	위 치	면적 (k㎡)	변 경 사 유
변경	-	대전 유성구 방현동, 신성동, 죽동 일원	1.360	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(국책) 개발사업 추진

3. 검토의견

- 본 의견청취의 건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현동, 신성동, 죽동 일원 등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사업지구내 적정규모의 산업용지 공급과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4조 내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을 위하여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,
-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현동, 신성동, 죽동 일원은 2020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에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으로 계획되었으며, 2020 대전도시기본계획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토지이용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된 지역으로 이 일대 약 1.36 제곱킬로미터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공업지역으로 조성하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임.
- 금번 계획의 목표년도는 2012년으로,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주거용지와 연구시설용지, 지원시설용지와 공공시설용지로 계획하였으며, 재원 및 투자계획은 용지비, 조성비, 간접비를 포함하여 총 3,790억원으로 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 자체자금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임.
-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사업은 지난 2005. 7월 「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이 시행되고, 2006. 8월 개발사업계획이 고시되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
- 금번 의견청취의 건은 대덕연구개발특구내 기 구성되어 있는 인프라와 더불어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미래를 선도하고 우리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,

-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대전 유치를 위해 필요할 경우 특구내 부지확보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,
- 금번 개발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,
-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수용으로 발생하는 이주민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이주자 택지공급 등 적극적인 이주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,
- 공사시 토사유출이나 장비투입에 따른 비산먼지와 소음발생 등 인근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예방대책을 적극 강구하고,
- 공사완료 후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도로시설 확충, 진출입동선 확보와 대중교통체계 확립 등 교통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